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도시재생

증가하는 등 언택트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우리의 삶도 언택트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꽤나 많이 변화시켰고 인류의 삶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 하거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는 포스트(post, 이후)와 코로나의 합성어로 코로나19를 극복한 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뜻밖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생태환경의 자연스러운 회복이다. 사람들의 활동이 뜸해진 도심에는 야생동물들이 활보하며 자유를 얻었다. 물의 도시로 불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은 줄었지만 수많은 물고기들이 찾아와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순간 해방되어진 듯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이 그동안 삶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며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회복 과정을 기후 친화적 사회·경제로 바뀌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발전 전략 등 녹색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녹색 정책으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는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졌다.

도시재생도 그린뉴딜이 발표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정된 자원과 경제성장 저하 및 각종 질병 등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 같다. 최근 자료를 보면 주민 역량 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그린리모델링 관련 집 수리 교육의 확대나 도시재생 사업 홍보 부분에서도 언택트 시대를 고려한 사업 홍보 전략 마련 등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은 최근 지정된 지구와 인정 사업 등을 포함해 329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막바지에 이른 사업 지역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시기이다.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지역에 만들어진 공동체 센터 등 거점 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운영이나 운영 방안이 있는지?

새로운 것에 대한 욕심이 좋지만 기존의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은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고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때 ‘헬조선’이라 칭하며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국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처럼 말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그린뉴딜이 생태적 환경과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있어왔지만 조금은 새로운, 아니면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핑계거리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社說

매각된 전방·일신방직 부지 난개발 막아야

광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전방과 일신방직 공장 부지가 최근 부동산 개발 업체에 팔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부지에 시민 편의와 공익성을 담보한 문화시설 조성 등을 준비 중이었던 광주시로서는 ‘땀 뚝뚝 개 지붕 찢다보느’ 꼴이 되고 말았다. 전방 임동공장은 2017년 말 가동을 중단했으며 일신방직은 아직 가동 중이다.

업체에 따르면 전방은 광주 북구 임동광주 공장 부동산을 3660억14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고 한다. 인접한 일신방직도 3189억8600여만 원 규모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두 곳 모두 부동산 개발 업체인 엠비엔프라퍼티와 휴먼스홀딩스에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부지 규모는 전방은 16만1983㎡, 일신방직은 14만2148㎡이다. 양도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며 거래 대금은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사전 협상 종료일에 주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곳에 또다시 아파트 숲이 들 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계약은 매각 대금이나 장소의 상징성 외에도 대규모 택지 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각이 이뤄지면 광주시의 기존 개발 계획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는 임동 공장 부지 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이나 주거 용지로 변경해 호텔·업무시설·쇼핑시설 외에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지난해 8월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이와 별개로 도시계획과 경관·교통·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안을 마련한 뒤 업체와 분협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부지 매각 계약으로 시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일단 매각 경위를 파악한 뒤 소 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전방·일신방직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앞으로 광주시의 대처를 지켜볼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획일적 고층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곳이 택지로 용도변경되면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준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광주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한꺼번에 틀어질 수 있다. 시는 광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이곳이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정부와 여당이 행정 수도 이전에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감사실 위원장은 최근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한 대표도 며칠 전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역시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2차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을 150여 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100여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늦게나마 당정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지방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올 들어 수도권 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경제 비중 역시 절반에 육박할 만큼 심화돼, 지방이 국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다만 1차 지방 이전 이후에도 공공기관 중 70%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몰려 있는 데다 권역별 편차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전 기관 배치 과정에서 기계적 균등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 수와 균형 발전 지표 등을 활용해 낙후 지역을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

기고

남북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면



김종배 전 국회의원 5·18 당시 시민학생투쟁위 총위원장

있다. 며칠 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북한 핵에 대한 현실 인식이 너무 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후보는 언론에 나와 “지난번 남측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김정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본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역으로 유추해 보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생존 수단으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그럼 당장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있을까? 이미 미국은 해와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지를 평택에 건설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미국의 많은 이해관계와 가치를 동반한다. 미국은 대륙의 끝 한반도에 최적의 군사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대량양 방어의 요새로 대륙 전역의

전략적 전진 기지이다. 미군이 오키나와나 괌으로 기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 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가 한미 워킹그룹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 국무부 소속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공동 대표이다. 우리 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우리 측에선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미국 측은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 인사 등이 참석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일부 여당에서 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보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유엔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과 우리 군이 북한 공군 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차례 훈련 비용으로 소모되는 1억 불은 고소란히 방위비 부담금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행히도 며칠 전 김정은이 북한노동당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핵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주목된다. 핵을 전쟁 억제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철도 현대화 사업에 관심이 많다. KTX급의 철도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종합병원 의료기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보다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북한 핵을 전쟁 억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김정은의 변화는 고무적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다이아몬드라도 전략보다 핵사찰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의 교착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기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하나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세계박람회제를 계기로 접근성과 숙박 시설이 크게 개선되면서 오가기가 쉬워지고 기본 먹거리에 잡자리까지 좋아졌다. 눈과 입이 즐겁고 귀가 시원해지면서 코끝의 바람이 막힌 가슴까지 뚫어 준다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정점은 버스커 벤틀러의 ‘여수 밤바다’였다. 남도에서는 어디나 가능하다. 두 바다와 맑은 섬, 넉넉한 산야가 각기 다른 풍광을 연출해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조금은 불편해도 어디서든 만상과 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지방 소멸’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전남은 참 심각하다. 고령화, 저출산과 청년 유출 때문이다. 의료 기술 향상이 가져다 준 수명 연장은 큰 축복이지만 작년 신생아가 1만 1000명밖에 사망자의 65%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해마다 7000여 젊은이들이 교육과 취업 등의 이유로 떠나면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는 1974년 412만 7000여 명을 최고로 185만 5000명(광주 포함 331만 명)까지 떨어져버렸다. 같은 기간 전국은 3470만 명에서 5180만 명으로 증가했으니 너무 심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뇌물 것인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도, 국책 사업은 늘 경제성과 접근성을 우선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말을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가 계속되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려면 주어진 여건을 널리 쓰는 지혜가 필요한데도 답답하다. 고령 관념을 깨야 한다. 서울도 처음부터 서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1392년 조선을 개국한 이태조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개성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한양으로 천도하기 위해 ‘신도 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한 것이다. 고대부터 한양군, 양주, 남경이라 불리며 북한산과 한강이 가져다 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간파한 통치자의 혜안이 오늘날까지 600년이 넘는 변장으로 이어지게 했다.

현대 서울은 수도권으로 팽창하며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국가 면적의 12%에 불과하다 보니 고밀도 집적화로 가야 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고 말았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처방은 규제의 역설이 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겨울에 “부동산 말고 팔릴 것 없다”고 했을 정도

다. 새로운 답을 내야 한다. 국민의 욕구를 어디로 터칠 것인가의 고민이다. 참여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 복합 도시를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혜택을 주는 묘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내 집 소유욕과 교육열을 연결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택과 교육비를 저렴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일이다.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함께 출산율이 0.98로 떨어졌다면 뭔가 부족했다는 것이니, 젊은 이들이 애만 날아 잘 길러도 먹고 살게끔 파격적이어야 한다. 그 시작을 수도권에서 가장 먼 이곳부터 해보자. 인구와 경제력 분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지원할 기반 시설과 교육 연구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다음 세대를 더 위하는 일이다.

과거는 현재를 보는 거울이라 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정책은 일관성 있고, 서울은 더 이상 특별하게 해선 안 된다. 미래로 가는 길을 달궐거리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바람이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신뢰와 협력의 땅으로 거듭날 남도의 내일이 그려진다.

無等鼓

고전이 널리 읽히는 이유는 ‘세월을 뛰어넘는 보편성’에 있다 할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더라도, 사람의 내면에 면면히 이어져 온 인간 정신의 정수가 고전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중국의 고전 관자(管子)에 나오는 ‘네 개의 밭줄’(사유, 四維) 이야기가 절로 떠오른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자 중국 최고의 경제가인 관중(管仲)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책 목민편(牧民篇)에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네 개의 밭 줄’이 제시되어 있다.

“나라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네 개의 밭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세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져 혼란에 빠지고, 네 개가 모두 끊어지면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 기우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고, 위태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으며, 뒤집어지는 것은 일으켜 세워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멸망한 것은 다시 일으킬 수 없다.”

너무도 유명한 이 이야기에서 ‘네 개의

밭줄’은 바로 예·의·염·치(禮義廉恥)다. ‘예’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넘지 않는 것이며, ‘의’는 분별없이 나서지 않는 것이다. ‘염’은 잘못을 숨기지 않는 것이며, ‘치’는 부끄러움을 알고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고기 잡는 그물이 형태를 유지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그물코가 벌어지거나 뜨지 않게끔 네 개의 밭줄을 튼튼하게 버텨 주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요즘 정치권을 돌아보면 국민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이미 오래전에 잊은 듯하다. ‘내가 최고’라며 분별없이 나서서 사람들 사방 천지에 깔겠다.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합법적’이라며 직방장 격으로 나서서 이들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이 나서서 민심을 우롱하는 것이 작금의 세상이다.

우리나라를 유지해 온 밭줄이 얼마나 삭았는지, 몇 개나 끊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 국가가 견제하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닐 터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네 개의 밭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9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